

로봇사용자와 로봇은 공존할 수 있을까

공존을 위한 첫 걸음, 사회적 합의

현대사회에서 윤리란 이제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다. 실버케어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애완용 강아지 로봇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로봇관련 신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고민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느 새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로봇기술은 사용자와 설계자 그리고 사회적 구성원간의 공감대가 모두 필요하다. 진정한 공존을 위한 로봇윤리,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글_신지연 선임연구원(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평가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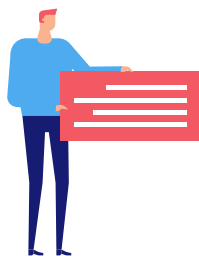


자동차 한 대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현 속도대로 계속 달린다면 곧 다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핸들을 오른 쪽으로 꺾어버린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엄마 손을 잡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와 그 엄마를 덮치게 된다. 당신이 이 자동차의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라면 이 자동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로봇은 더 이상 영화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산업·의료용 로봇 등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애완용 강아지 로봇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이른바 “실버케어 로봇”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향한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로봇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생활 깊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로봇윤리현장이란?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피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로봇윤리

로봇이 인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하여 행동한다면 어떨까? 앞의 사례로 돌아가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가 계속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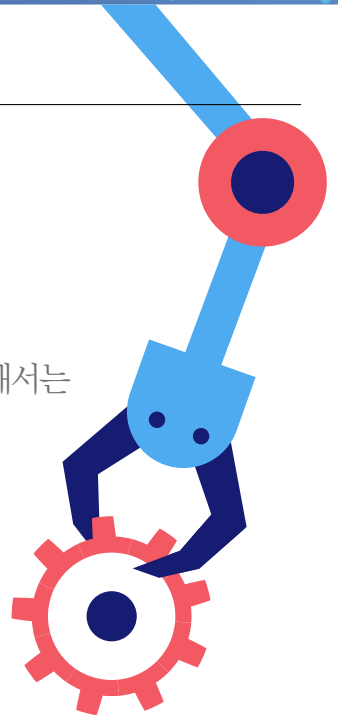
면 다중 추돌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는다면 엄마와 아이 2명의 희생자만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운전자라면 소수를 희생하여 다수를 살리는 선택이 옳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아이를 살리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로봇과 윤리의 문제이다. 아무리 로봇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하더라도 도덕적 요소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로봇의 등장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윤리를 논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점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로봇을 올바르게 제작·사용해야만 이들과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 시점에 부합하는 로봇윤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와 설계자,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현재의 로봇윤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먼저 로봇기술에 대한 기대와는 별도로 로봇기술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현 시점에서의 로봇윤리는 로봇을 도구적 지위에 놓고, 인간이 로봇기술을 악의적, 비윤리적으로 설계·제작·사용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1인 애완용 강아지 로봇이 실제 집안의 모습이 모두 녹화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설계자가 언제든지 모니터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로봇의 설계자는 사전에 이와 같은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윤리적으로 로봇을 설계해야 한다.

로봇의 사용자 역시 윤리적으로 로봇을 이용해야 한다. 로봇 사용자는 로봇의 본래 목적 또는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로봇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인간이 로봇의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반면 이를 악용하거나 오남용

인간과 로봇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로봇 관련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애완용 강아지 로봇을 사용자가 임의 개조하여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로봇 사용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로 꿈꾸는 로봇시장의 진흥

우리나라에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2018년 6월 개정)이 시행 중이다. 위와 같은 로봇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법 제18조에서는 “지능형 로봇윤리현장”의 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현재 정부주도의 로봇윤리현장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봇윤리현장은 로봇의 개발·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인 만큼 그 내용에 사회 각 구성원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의 경우 로봇 사용 시 필요한 안전 확보 및 정보제공 등의 소비자 관련 권리를 로봇윤리현장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로봇사용자의 권리보장은 곧 로봇시장의 진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과 로봇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로봇 관련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